

# 네이버 '매물정보 독점' 과징금 10억... 법적 대응 검토

네이버부동산서비스 지배력 남용 '확인매물 제3자 제공금지' 조항 부당계약으로 경쟁사 진입 방해 네이버 "혁신없는 무임승차 방지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위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가 네이버와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

카카오가 부동산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 시도가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카카오의 부동산 서비스 확장 실패 과정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화면 캡처. 매물 목록에 '확인매물' 표시가 되어 있다. /구서윤 기자

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와 매물 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업체에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업체들은 카카오에 네이버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제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후 5월 네이버는 계약서에 관련 조항도 삽입했고, 2016년 5월에는 부동산 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 '확인매물정보는네이버가구축한 자산'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 스스로 구축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당하고,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네이버의 매물 정보를 쉽게 확보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 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로 들어오는 모든 매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 O) 산하의 매물검증센터에서 매물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확인매물'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돼왔다.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운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네이버는 중개사들을 설득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켰다. 이후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

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또한 금지 조항을 넣기 전 카카오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매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 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 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의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와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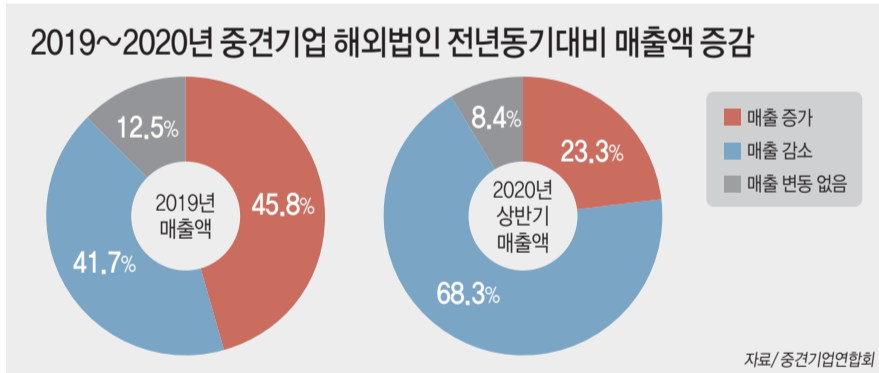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중견기업 해외법인 10곳 중 7곳 실적 악화

코로나 여파 평균 12% 매출 감소 해외법인 자산 담보 금융지원 절실

중견기업 해외법인 10곳 중 7곳 가량이 올 상반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흐름이 나빠지고 현지 은행을 통한 대출도 여의치 않은 등 애로가 많아 해외법인 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해외법인을 보유한 중견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6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68.3%가 전년 동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적으로는 12% 매출이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중견기업은 23.3%였다. 8.4%는 변동없었다.

중견기업들이 해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상반기에 겪은 가장 큰 애로는 '돈'이었다. 24%가 '전반적인 자금 흐름 악

화'를 최대 난제로 꼽은 가운데 '현지 은행 대출 애로'(12%), '자금 상환 압박'(10%),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10%) '추가 대출 불가'(8%) 등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45.5%는 해외법인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국내 은행이 해외법인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20.9%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22.4%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45.5%가 이같은 금융지원이 자금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비제조 중견기업의 60%는 해당 대출 상품 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태풍 하이선 북상 산사태 위기 경고 7개 시·도 '심각'

산림청은태풍 제10호 '하이선'이 7일 새벽부터 남해안, 동해안 지역을 따라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위기 경보를 6일 9시부터 7개 시·도 '심각', 10개 시·도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태풍에 따라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300mm 이상 많은 강우가 예상되고, 지난 장마 기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대규모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도는 제주,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전남이다.

이번 태풍은 기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초기 예측을 벗어나 동쪽으로 치우쳐 통과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선 9호 태풍 마이삭과 이번 10호 태풍 하이선을 대비, 지난 1일부터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시설, 숲가꾸기 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고 기존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방수포 덮기, 마대 쌓기, 물길 돌리기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박종호 산림정장은 "이번 10호 태풍 하이선은 장마 기간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앞선 두 번의 태풍보다 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예보돼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지나칠 정도의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 코로나 재확산에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유일 중 경기 회복세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살아나던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민간소비 등 회복세가 현저히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은 경제활동 재개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5월 8.4%, 6월 5.7% 늘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에는 1.6%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은은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14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됐다"며 "특히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화·민주 양 당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향후 소비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재난지원금은 5월까지 대부분 집행됐고,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한은 7월 말로 끝났다.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

일본의 7월 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기 대비 -3.3%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5월 25일 긴급사태 해제 이후의 개

선세가 꺾였다.

7월 들어 신규확진자 급증과 함께 소매점·여가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이 둔화되는 등 외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됐다. 일평균 신규확진자 수는 6월 58명에서 7월 509명, 8월 1088명까지 급증했다. 이와 함께 6월 소매판매 회복이 끝났던 정부의 보조금 지급 효과도 7월 들어 약화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정책효과 약화 등이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 민간소비는 감염병 확산 지속과 소비심리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

/한상미 기자 smahn1@